

무공천 여파 ... 후보 공천 자생단체 '우후죽순'

광주 시민공천추진위 '지지자참여형 배심원제' 도입 "분별력 떨어지고 공정성 훼손 ... 유권자 혼선" 지적도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측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 무공천'을 선언한 가운데 일부 자생단체들이 시민 경선을 통해 '시민 후보'를 공천하겠다고 나서면서 앞으로 '후보 공천'을 위한 유사 단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이 평가해야 할 몫을 시민 대표성이 없는 일부 단체들이 평가할 경우 여론을 호도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일부 정당의 '기초선거 무공천'에 따라 일부 자치단체장 선거 입지자들끼리의 '합종연횡'이 시작됐다 이어 최근에는 시민 후보를 공천하겠다는 자생단체들도 생겨나고 있다.

광주지역 종교·문화·교육·정치·학계 등

시민사회 각계 각층이 참여한 공직자 후보 추천 '시민공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11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 최초로 '지지자 참여형 배심원제'를 통한 시민경선을 통해 후보를 공천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추진위는 일부 정당의 기초지방선거 무공천에 따라 후보난립으로 인한 유권자들의 혼란 가중과 돈 선거 등 혼탁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장 출마 예정자들의 지지자와 반대자를 포함한 지역주민을 배심원으로 참여시켜 시민 공천을 하겠다는 것이다.

과거 민주당 등 정당 공천을 받은 후보들과의 경쟁을 위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 후보 추대 등은 있었지만, '기초선거

무공천'으로 일부 정당의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일부 단체가 시민공천을 하겠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러한 시민경선 자체가 선명성과 분별력이 떨어지고, 공정성이 훼손될 경우 유권자들에게 심각한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지역에서 조직력이 강한 후보들이 조직동원 등을 통해 시민배심원을 많이 참여시킬 경우 공정성이 훼손되는 등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일부 단체들이 이러한 유사조직을 구성해 후보 공천을 추진할 경우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후보를 선정하는 폐해도 생길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설명이다.

지역정치권 관계자는 "선거철을 앞두고 생겨난 대표성 없는 기관에서 시민의 대표를 검증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라며 "이

들의 후보 공천이 구속력이 없긴 하겠지만, 앞으로 일부 정당의 '기초선거 무공천'을 약용해 유사 단체들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광주시 선관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선거법상 절차만 잘 지킨다면 일부 단체 등에서 시민경선, 시민 후보 추대 등은 가능하지만, 애초 목적이 아닌 특정인을 밀어주기의 경선이나 추대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에서도 사단법인 시민협이 '6·4지방선거 좋은 후보 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좋은 시민 후보를 추대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곡성에서도 최근 재광공성항우회가 주관해 민주당 소속 예비후보들의 단일화를 주도했다.

하지만, 여론조사기관 선정과 과정 등의 의혹을 제기한 한 후보가 파기를 선언하면서 단일화가 '불발'에 그치기도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안도국제해조류박람회 성공 개최합시다"

10일 안도군청에서 박준영 전남지사과 도청 실·국장이 참여해 개막 한달여를 앞둔 안도국제해조류박람회의 홍보 마케팅 및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민주-새정치, 시·도위원장 공천 신경전

새정치 광주 예비후보들, 민주당에 정치혁신 촉구

민주 "벌써부터 5대5 요구 심한 것 아니냐" 불만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 신당' 창당을 앞두고 지역의 양 진영이 시·도 위원장과 지역위원회 선정, 공천을 앞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0일 지역정계에 따르면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큰 틀에서 신당창당에 합의했지만, 실제 양측이 '화학적 결합'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통합 과정에서 양측이 합의한 5대5 원칙이 시·도당을 비롯한 지역위원회까지

지켜질지에 의문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전남 새정치아카데미 수료생 20여명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의 진정한 변화없이 구태와 기득권 세력을 온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면서 "기득권 일체의 포기과 새정치를 위한 정치혁신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공정한 공천을 위해 선거인단

이나 배심원단, 공천심사위 등에서 동등하게 참여해야 한다"고 공정한 경선물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는 통합정신에 입각해 5대5지분을 사실상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들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아직 창당준비단에서 어떤 결정도 없는 상황이고, 현실적으로 지역의 당원 규모가 크게 다른데 벌써부터 지역에서 5대5 지분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박지원, 도지사 불출마해야"

일부 전남도의원 주장

전남 일부 도의원들이 10일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전남지사 출마를 만류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 윤시석(장성) 의원 등은 이날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지원 의원은 전남도지사 불출마를 선언하고 지방선거에서 통합신당의 승리를 위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지원 의원 측은 "여러 의견들 가운데 하나다. 크게 개의치는 않는다. 전남과 호남 정치권, 통합신당의 미래를 위해 어떠한 역할이 필요한 것인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알기쉬운 선거법 (1) 광주일보-광주선관위 공동캠페인

선거일 제외 누구나 문자메시지 선거운동 가능

선거운동기간 전 가능한 선거운동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5월22일~6월3일)에는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유권자나 예비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관련자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선거운동에 차이가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선거운동=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기나 컴퓨터 등을 이용해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1회 20명 이내)할 수 있다.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본인의 선거운동=선거사무소를 설치해 외부에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하고,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배부하고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고, 전화를 이용해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해 발송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구·시·군의 장 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작성해 판매할 수 있다. 아울러 누구나 할 수 있는 전화기나 컴퓨터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이외에 다량의 문자메시지 발송은 예비후보자와 후보자 신분을 합해 5회 이내에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선거운동=독자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어깨띠 등을 착용하면 안 된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장자 선거운동=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 그리고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활동 보조인은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면서 명함을 배부하고 지지 호소를 할 수 있을 뿐 독자적으로 명함을 배부할 수 없고, 어깨띠 등 착용도 안 된다.

윤장현 "다음주 광주시장 출마선언할 것"

"5대5 원칙 지역서도 지켜야"

새정치연합 윤장현 공동위원장은 10일 "다음 주에 광주시장 선거 공식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출마선언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광주·전남지역 국회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하고 이같이 말한 뒤 "광주가 한국의 '빛'이었는데 자꾸 '짐'이 돼가는 느낌"이라며 "이제 당당한 광주가 되도록 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윤 위원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통합신당의 호남지역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전략 공천 주장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될 수도

없고 논의되지도 않았다"며 "향후 과정을 지켜볼 것이며 당당하게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과 통합 합의 때 나온 '5대5' 의미에 대해 "5대5의 합의 정신은 지역 예까지 이어져야 한다. 시장위원장의 경우도 공동으로 해야한다"며 당 지도부 구성을 넘어서까지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신당 창당 작업과 관련 "시도당 창당대회의 경우 광주·서울·경기·대전·부산 등 5개 지역에서 치를 것으로 생각된다"며 "일각에서 생각하는 23일 중앙당 창당대회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남도 선관위,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에서 사이버상의 선거법 안내 및 예방활동과 위법행위를 감시할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11일부터 21일까지이며, 선발된 사이버 공정 선거지원단원은 전남도 선관위에서 4월 7일부터 6월 4일까지 근무하게 된다.

지원자는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합격자로 선발되며, 사이버상에서의

선거법 안내 및 예방활동, 선거관련 정보수집 등 예방·단속활동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사이버 공정선거지원단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 서식을 전남도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작성한 후,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e-mail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사이버 공정선거지원단원은 주 5일, 1일 8시간을 근무하며 1일 임금은 4만7800원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주식회사, 오천경매

대표, 최 선 규 드림
직통, 010-3605-5000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39, 2001호

"경매"에 관한 모든 것!

● 특수비법 배우실 분!
교육비, 1200만원

● 공동투자 하실 분!
소유권 이전으로 보장

● 돈 빌려 주실 분!
근저당으로 보장